

2013. 8. 14. (수)

2012도13665 절도 사건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이상훈)은 2013. 8. 1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I. 사안의 내용과 쟁점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甲)의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음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함
- 제1심은, 피해자(甲)와 참고인(乙)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 1심에서 甲과 乙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증언함, 참고로 甲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이에 검사가 甲을 소환하여 위증혐의로 입건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甲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임
- 원심에서, 검사는 이와 같은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甲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乙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졌음(甲은 소재불명으로 소환되지 못함) → 乙은 피고인이 무죄라

는 취지의 종전 증언을 유지함 → 원심은,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를 주된 근거(그 외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II.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원심은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경위에 관한 甲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검사가 추궁하여 甲으로부터 그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증거능력이 없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쳤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III. 이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등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
- 본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좀 더 확장하여, '검사가 공판기일 등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위증으로 인지하여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건(증언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임